

# 한국의 방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 (2)



崔東喆  
국방부 감사관실  
행정사무관

현재 부품 국산화 조달계약제도는 비용보상형 계약 제도로서 업체의 국산화에 대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여도 이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원가절감 보상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하며, 국산화된 경우에는 개발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행정소요기간 단축 등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여 주어야 한다.

- 필자 주 -

## 방위산업 소유 · 경영구조 개선

**방위**

산업은 국가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회 간접자본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단일 수요자(군)에 의한 시장활동 및 균형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방위산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한 소유와 경영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효율성 증대와 기술 개발을 위하여 민간 소유로 시작되었거나, 도중에 민간소유로 변환된 상태이다. 과거와 같이 군의 수요가 충분한 때에는 이러한 소유와 경영 구조가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할



독립기념관 상공을 초계 비행하는 KF-16 편대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소요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방산의 민간소유 및 경영구조가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선진국 및 군사강대국의 방위산업 소유·경영구조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방산구조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 ● 선진국의 소유·경영구조

방위산업의 소유·경영구조 형태<sup>1)</sup>는 정부소유·운영의 Go-Go체제, 민간 소유·운영의 Co-Co체제 및 그 중간단계의 정부소유·민간운영의 Go-Co체제 등의 3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소유구조를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Go-Go체제는 구 소련 등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Co-Co체제로 운

영되었다.

이와 반면에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의 군사 선진국은 Co-Co체제, Go-Go체제 및 Go-Co체제를 산업별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선산업은 투자와 운영이 전적으로 민간소유로 이루어지나, 항공산업은 민간투자와 정부투자가 혼합되어 있고, 전차산업은 모든 생산시설이 정부소유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일부 방산업체가 정부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항공·군수분야를 담당하는 국영 방위산업인 IAI사와 IMI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이 소유·경영구조의 혼합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산업별로 역사적 배경이 틀리고, 무기소요와 해당 무기체계의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의 방위산업 소유/운영 체제

Co-Co	Go-Co	Go-Go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미국(항공, 함정), 프랑스(항공, 유도), 이스라엘(항공, 군수)	러시아, 중국, 미국(전차, 탄약)

● 한국의 소유·경영구조

과거 탄약 및 기동 등의 분야는 군이 정비창과 군공장을 소유하여 Go-Go체제를 유지하였으나, 무기체계 생산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군 공장을 민영화함으로써, 현재는 완전한 Co-Co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를 통한 Co-Co체제로의 전환은 과거 군 수요가 충분하고, 신규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계속되던 '70년대 및 '80년대에는 방산업체의 경영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요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방산업체가 방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발전적인 방산기반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Co-Co체제는 이익 극대화를 경영목표로 추구하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방산제품의 생산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구개발투자를 소홀히 하여, 연구개발 능력의 확대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이 생산(민간업체) 및 연구개발(ADD)을 분리함으로써 연구개발 능력의 확대를 정부가 책임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업체의 방산제품 생산을 통해 획득한 이윤의 재투자를 정부가 대신하여 준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 정부는 업체에 대한 원가계산시 최소한의 이윤만을 보장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의한 추가적 효용이 최종 수요자인 정부에 귀착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나, 군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이윤만 보장하는 원가계산 방식은 업

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방산 기반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군의 수요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방산기반을 유지시키고 연구개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생산·연구개발의 일원화 혹은 생산시설의 정부소유를 통한 연구개발 확대 방안(군의 수요부족으로 인해 업체에 의한 생산 및 연구개발 일원화는 불가능, 이 경우 업체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자금보조가 필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군 공장의 민영화가 이루어져 Co-Co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시 방산업체를 정부가 구매하여 Go-Go 또는 Go-Co체제로 복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발전적인 소유·경영구조

군 수요부족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o-Go 또는 Go-Co체제로의 복귀 이외의 다른 방안이 필요하므로 Co/Go-Co체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산 소유·경영구조를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sup>2)</sup>

Co/Go-Co체제는 소유와 경영은 민간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일부 필수 설비와 인력은 정부에 의해 소유·지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향후 수요물량의 부족현상에 따라 방산업체의 인력 감축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데,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업체의 고정비를 감소시키고, 공정자동화에 필요한 설비는 정부가 구입하여 업체에 무상대여 또는 리스 형태로 임대해 주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전시대비 필수 무기 생산설비도 Co/Go-Co 개념으로 정부가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경

연구조는 특히 기본병기분야에서 절실하다. 기본병기류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산업체는 방산에 흥미를 잃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 업체의 폐업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KF-16 전투기 등 항공분야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정부에 의한 생산/설비 구입(치공구류, 약 2,000억원) 및 무상임대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기본병기 등 타 무기체계 분야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방위산업의 기술중심화

기술능력이 없는 방위산업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독자적 연구개발이나 외국 업체와 협력도 불가능하다. 국외도입 위주의 무기체계 획득은 장비 구매비, 정비비, 운영유지비의 급증은 물론, 국방기술의 군사 선진국 종속화와 국내연구개발의 기회 상실로 방위산업 기반의 열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방산업체가 기술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생산위주로 경영을 하면 기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방산업체는 국방부나 군에 로비 등을 통하여 생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에 보다 치중할 것이다.

또한 방산업체가 기술능력이 없고, 연구개발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진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이 힘들기 때문에 기술도입이나 면허생산과 같은 생산협력은 가능할 것이나, 공동연구개발과 국내 독자개발은 어려울 것이다.

방위산업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고 방산업체의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의존형, 국내 시장 중심형, 제조중심형에서 기술 중심형의 방위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술력 있는 방위산업으로의 전환 즉, 기술능력 있는 방산업체로 육성하는 것이다.

방산업체가 기술중심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주도로 군사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무기체계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 ●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사업 추진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도에 향후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부족한 기술을 목표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방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당시를 기준한 한국의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41% 수준으로 판단하였다.<sup>3)</sup>

이 수준은 국방과학연구소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은 이 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방산업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립생산과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업체가 주도하여 책임을 지고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무기체계는 K-9신형차주포, 고등훈련기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비록 국방획득규정에 '업체주도 연구개발' 방식이 있으나, 업체의 기술능력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개발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요 무기체계의 업체주도 연구개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핵심기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못하니 기술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기반을 구축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방산업체 기술력을 키우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방위 산업은 건강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78개의 방산업체가 지정되어 있지만, 일부 소

방산업체와 국과연의 역할분담

구 분	수 행 역 할
국방과학연구소	• 비익성 무기체계, 첨단기술 중점 개발
방 산 업 체	• 첨단 및 비익성 무기체계를 제외한 경제성 있는 모든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 • 일반기술 및 부품개발

수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술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방산업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지 못했고, 방산업체를 기술 중심으로 육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sup>

국과연에서 식별한 총 핵심기술은 7,009개이며, 2006년까지 선진국 대비 75%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106개의 핵심기술 능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5조 182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술분야로는 체계공학기술이 전체의 20.3%, 센서/신호처리기술이 18.7%를 차지하고 있고, 기술형태별로는 설계기술이 41.5%, 해석/분석기술이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작기술은 11.6%로 상대적 비중이 낮았다.<sup>5)</sup>

이러한 핵심기술이 뿌리를 내리고 방산업체의 기술중심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산업체 구조를 개선하여 핵심기술 개발은 국과연과 업체간 합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업체는 현재의 방산업체와 신규업체를 포함하여 약 200여 개의 업체중에서 선정하고, 향후 5년 동안 기술을 개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선정된 업체는 필요시 세계 어떤 나라와도 협력하여 목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 \*1단계 : 핵심기술 후보 식별 및 최종 선정
  - 향후 획득해야 될 무기체계와 방위산업 국제협력 촉진을 고려하여 선정
- \*2단계 : 기술개발 목표설정 및 소요예산 판단
  - 각 핵심기술별로 구체적 개발목표 설정

- 민·군 겸용기술의 구체화
- 소요예산 판단
  - \*3단계 : 국내 개발업체 신청 및 업체선정
- 기존 방산업체 및 신규 민간업체로부터 개발계획서 접수, 검토 및 선정(필요시 복수로 선정하여 개발실패 방지)
- 소요예산 반영
  - \*국과연/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장려

●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실질적 확대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업체주도 연구개발방법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고등훈련기 개발사업과 같이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없는 한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확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방기본정책서’ 나 ‘국방획득개발계획서’와 같이 국방부 상위문서에는 향후에 획득할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우선원칙과 국과연·업체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방산업체는 기술수준과 체계종합능력 부족으로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즉, 핵심기술 및 체계종합 기술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과연이나 외국 방산업체와 기술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개발이 어렵고, 개발비용과 기간도 군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들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스라엘,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사업을 제기하고 예산화하여 직접 수행하는 체

제이기 때문에,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과연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국과연이 수행하고, 업체는 생산만 하는 현재의 개발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주도 연구개발 확대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연구개발사업의 소요제기·확정 등 제반사항의 기술검토와 평가를 국과연이 담당하는 것도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sup>7)</sup>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 사업은 원래 국과연 제3본부에서 개념연구를 담당했고, 항공기분야 기술축적과 관리를 위하여 국과연주도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Lockheed Martin사와의 국제 기술협력 개발로 추진하였다.

개발착수 4년여 만인 2001년 10월 KAI 사천공장에서 첨단 디지털시스템을 갖춘 초음속 고등훈련기(T-50)와 경공격기(A-50)의 시제기가 출고되었으며, 공군 조종사들의 시험비행을 거쳐 2003년 양산에 들어가 2005년부터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고등훈련기의 국내개발에 따라 2017년 개발예정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시 상당한 기술적 기여가 예상되며, 동급 항공기 직구대 대비 23억달러의 외화를 절감하고, 연 인원 2만여명의 고용창출 등의 부가가치로 인하여 국내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키, 그리스, 이스라엘,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수출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최소 800대(약 300억달러, T-50 350대, A-50 450대)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sup>8)</sup>

K-9신형자주포도 업체주도 연구개발로 생산되어 전력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터키와 300여대의 수출계약(약 10억달러)을 체결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 캐나다, 스페인 등과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고등훈련기와 K-9신형자주포의 수출규모는 1995~2000년 6년간 방산물자 총 수출금액이 4.2억 달러에 불과한 점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업체주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지원과 방산업체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세계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여러 면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 발전적으로 국익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방위산업 경영여건 개선위한 정책적 지원

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방위산업을 정부의 조정·통제하에 육성시키고 정부가 방위산업 기반유지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방산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이 법에 근거하여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등 세제감면 지원, 연구개발 및 원자재 비축 등 자금지원, 계약 및 원가계산상 지원 등이 있다. 일반 주요산업체와 비교한 방산업체 특례지원제도 내용은 P.72의 표와 같다.

1990년에 들어서부터 국내소요 감소로 방산 유희시설이 증가되고 기술인력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방산업체는 방산시설을 민간제품 생산 시설로 개조하여 전환시키고 있다. 정부가 필수 유지시설과 인력에 대하여 보조금 및 기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나,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분야의 정확한 식별도 안 되어 있고, 국방예산 제한으로 뒷받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01년부터 유희설비 유지자금 일부를 방위산업 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

방산업체 특례지원제도

구분	방위산업	주요 일반산업
자금지원	방위산업 육성기금	공업발전기금 등
세제감면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관세	감면율: 70% 감면기간: '05.12.3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별소비세	면제('03.12.31까지)
계약	수의계약	경쟁계약
원가계산/착수금	노무비: 실발생 착수금: 계약금액의 78%	노무비: 시중노임 착수금: 계약금액의 70%
기타	연구개발, 절충교역 우선 참여	-

\*자료출처: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2002. 8

있다. 2001년에는 9억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 2003년에는 각각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업체의 실소요금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위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성기금 추가확보 등 다각적인 정부의 정책개발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일관된 정책 추진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계획생산을 위하여 수립된 정책은 주변상황과 여건 또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K-1전차 성능개량사업(K1A1전차)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변상황과 정책결정자 의지에 따라 개발형태·방법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K-1전차 성능개량사업'은 1990년 5월 북한의 차기세대 전차인 T-72/80급 전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1992년 12월 북한의 T-72전차 보유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 등으로 'K-1전차 주포개량사업'으로 축소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은 주포개량을 포함하여, 포수조준경(KGPS, Gunner's Primary Sight), 전차장 열

상조준경(KCPS, Commander's Panoramic Sight), 탄도계산기(KBCS, Ballistic Computer System), 포 및 포탑구동장치, 유기압현수장치 등 20여종을 각각 별도로 성능개량을 하였고, 1995년 8월 사업명칭도 'K-1 전차 성능개량사업'으로 다시 환원하였다.

전차의 주포와 전차탄은 1991년 10월 방산업체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연구개발로 추진하였으나, 1992년 10월 기술도입생산으로 변경하였다. 주포는 1998년 8월 물량감소(456 → 193대)를 이유로 다시 국외 직구매로 변경하여 1, 2차사업 96대분을 美 GD사에서 수입하여 장착하였으나, 2001년 6월 다시 국내연구개발로 변경하여 방산업체인 (주)위아에서 개발하였다.

전차탄도 1997년 3월 기술도입생산에서 국내연구개발로 변경하였다. 또한 KIA1전차 체계사업은 국과 연관리 업체주도 개발사업이나, 주요기능품목인 KCPS는 육군관리 업체주도 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계약·원가관리가 이원화되어 인력·예산의 추가소요, 기술발전 저해, 적기 전력화 차질, 사업의 혼선 야기 등 많은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또 다른 예로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사업을 들 수





주포를 개량한 KIAI 전차

있다. KDX-I (3,000톤급)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하였으나, KDX-II (4,200톤)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에서 물량을 나누어 생산하고 있다.

잠수함사업도 209급(SSU 1,200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하였으나, 214급(KSS-II 1,800톤)은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개 업체 경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술향상과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생산능력업체를 다수 보유함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조합 사업은 특성상 대규모의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소요량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 설비와 인력의 중복투자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탈락 또는 참여제한에 따른 설비와 인력의 유희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대중공업도 단기적으로는 신규 소유물량 확보로 경영합리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소유물량 확보가 불투명하여 막대하게 투자한 설비와 기술인력의 유지문제가 조만간

에 대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개 업체 모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스웨덴처럼 단일업체가 특정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거나, 이스라엘처럼 경쟁원칙을 정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나, 어떤 사업은 생산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등 경쟁 논리로, 저런 사업은 중복투자 방지 등 방산업체 보호육성 논리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와 군, 방산업체 모두에 유익하고 공정한 타당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 방산업체의 계획경영 지원

이제는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정책보다는 합리적으로 수립된 정책 기반위에서 방산업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있는 방산물자 중기소요물량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예산부족과 여건 변화 등을 이



## 우수논문

유료 소요물량이 수시로 변경되어 방산업체의 계획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개발장비를 포함하여 정확한 방산물자 소요물량을 통보하여 주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을 최소화하며, 변경내용도 해당 업체에 즉시 통보해 주어 방산업체가 계획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산업체가 중·장기 경영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방산업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중·장기 획득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남북한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무기체계 소요의 공개는 군사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의 군사 잡지 및 언론에 수시로 공개되고 있고, 무기체계 소요 공개가 반드시 군사활용 목적에 저해된다고만 볼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획득소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도 일부 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기체계 소요 계획 발표회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국방부, 합참, 군이 방산업체와 합동으로 중·장기 소요 발표회를 추진하거나, 스웨덴과 같이 방산업체 참여하에 무기체계 소요를 확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기체계 소요제기는 군의 고유권한이나, 군이 소요제기시 국내업체의 기술능력과 업체의 향후 계획, 해외정보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진국 방위산업형으로 우리의 방위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군과 업체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KT-1 기본 훈련기의 제조공정



● 방산물자 국산화 촉진

방산물자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부품 모두를 국산화할 필요는 없으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첨단 핵심분야와 획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국산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체가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인식 때문에 국산화가 촉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약제도로 바꾸어야 된다.

현재 부품 국산화 조달계약제도는 비용보상형 계약제도로서 업체의 국산화에 대한 유인책이 별로 없으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여 원가절감을 하여도 이득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산화하면 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원가절감 보상형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하며, 국산화된 경우에는 개발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행정소요기간 단축 등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여 주어야 한다.

● 원가계산 및 계약제도 등의 지원

현재의 원가계산제도는 연구개발사업과 양산사업 모두에 동일한 이윤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발실패 위험성이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보다 높은 이윤을 적용하여 적정원가 보상과 연구개발 참여를 적극 유인하고, 원가 불인정 항목인 해외시장개척비, 사업준비비, 광고선전비 등은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은 보상에 주어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일정한 예정가격율(예가율, 재무관 판단)을 적용하여 삭감함에 따라, 일반 제조업체보다 낮은 이윤율(일반 제조업체 8.1%, 방산업체 5.7%)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실발생 원가 및 이윤의 적정보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계약제도에서는 정부와 방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원가절감보상계약' 과 '유인부정산원가 계약'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계약절차·방법이 번거롭고, 시간·인력이 과다 소요되며, 관행에 따라 기존계약(확정계약, 개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인센티브 향상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위산업 부문의 계약·원가관리가 기획·계획에 의한 통제보다는 계약금액 결정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기획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원가계산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sup>9)</sup>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제도에 있어서도 이 제도의 목적이 방산업체 육성에 있음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의 사용여부에 대한 감사위주 등의 소극적·보수적인 차원보다는 방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혁신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검증절차도 간소화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소요도 방지하고, 예산부족(연부액 부족액) 부분은 저금리 은행융자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註

- 1) 방산 소유구조 형태 : GO-GO체제(Government-Government), CO-CO체제(Corporation-Corporation), GO-CO체제(Government-Corporation)
- 2) 김홍욱, 「방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7.12, p.37.
- 3) 김종율, 「국방과학기술 기반 구축방향」, 한국방위산업학회 정책세미나 발표 논문, 2000.11.28, p.9.
- 4) 황동준, 「한국의 방위산업」, 한국국방연구원, 2000.12, p.65.
- 5) 김종율, 전게서, p.10.
- 6) 황동준, 전게서, pp.65-66.
- 7) 황동준, 전게서, p.67.
- 8) 뉴스메이커, 2001. 11.15. pp.54~55. 한국일보, 2001, 11. 1일자 30면.
- 9) 방용철, 「원가관리」, 국방대학원, 1998, p.8.